

러시아·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현황과 전망

강 원 식*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형성 배경
및 전망 |
| II. 러·중 관계의 현황 | IV. 한반도예의 영향요인 |

I. 서론

러시아와 중국간의 관계는 50년대의 동맹관계와 60년대의 논쟁관계를 거친 후 70년대에 적대관계로 첨예화되다가, 80년대에 들어 완화되기 시작하여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마침내 정상화되었다. 그 후 러·중 양국은 1992년 12월 옐친 방중시 「실질적 동반협력관계」 발전에 합의하였으며, 1994년 9월 강택민(江澤民) 주석의 방러시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하고, 1996년 4월이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옌친 대통령은 1996년 4월 24~26일 중국 방문을 통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21세기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우려(미국 견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¹⁾ 또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정례화하고 양국간 직통전화(Hot Line)²⁾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동시에 14개의 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쌍무관계 긴밀화와 대서방 공조의를 과시하였다.

그후 미하일로프 원자력장관(96. 10. 17), 프리마코프 외무장관(11. 17~19), 볼샤코프 제1부총리(12. 9), 스트라토프 검찰총장(97. 3. 22~4. 1), 로디오노프(4. 13~18)의 중국 방문과 이붕 총리(96. 12. 26~27), 전기침 외교부장(97. 3. 24~26)의 러시아 방문 등 각료간의 상호 방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997년 4월 22~26일간 강택민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다극체제 및 신국제질서 수립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4. 23)하고,³⁾ 최대현안이었던 국경병력감축협정에 조인(4. 24)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중·소분쟁 이후 최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그 후 우영파(于永波) 중앙군사위 위원(5. 17~23)과 서혜자(徐惠滋) 군사과학원장(6. 2)이 대표단을 끌고 러시아를 방문하고, 넴조프 제1부총리(6. 24~6. 27)와 체르노미르딘 총리(6. 26~6. 28)가 중국을 방문하여 제2차 러·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관계가 현저하게 긴밀화되고 있다. 특히 1997년 11월 11~12일 옌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5번째 러·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양국간의 정치관계 수준에 걸맞는

1) 공동성명 전문은 *Diplomaticheskii vestnik*, No. 5, 1996. 5 참조. 공동성명에서 양국관계는 “21세기의 전략적 상호관계를 지향하는 동등하고 신뢰 있는 동반자관계”로 표현되었다.

2)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있는데, 중국은 러시아의 19번째 핫라인 설치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과 핫라인을 설치하지 않아왔는데, 이로써 러시아가 첫번째 핫라인 설치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1995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핫라인 설치 제의를 거부한 바 있으며, 그후 1997년 10월 28일 강택민 주석의 방미시 정상회담에서 핫라인 설치를 합의하였다.

3) 공동성명 전문은 *Nezavisimaya gazeta*, 1997. 4. 25 ; 「人民日報」, 1997년 4월 23일

경제관계 발전이 강조되었다.

이하에서는 양국관계를 경제·군사교류, 국경선 획정문제, 군축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II. 러·중 관계의 현황

1. 경제교류

1996년 중국은 독일과 미국에 이어 러시아의 3번째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중국에게 있어서도 러시아와의 무역은 중요하여 러시아는 7~8위의 무역상대국이다. 러·중 무역액은 1993년에 77억 달러(중국측 수치)에 달하여 최고를 기록한 후, 1994년에는 러시아의 비자제도 도입으로 인해 중국 상인의 러시아 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무역액도 약 50억 달러로 격감하였다. 그러나 무기수출 등을 위주로 재차 확대되어 <표 1>에서 나타내듯이 1996년에는 약 68억 달러(러시아의 수출 51억 달러, 수입 17억 달러)로서 러시아의 압도적인 수출초과를 기록하였다. 1997년의 양국간 무역은 더욱 확대하여 연간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간 교역을 2000년에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구상은 1996년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엘친이 제안하고 그 후 9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철영(李鐵映) 중국 국무위원 겸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과 다비도프(Oleg D. Davydov) 러시아 부총리 겸 대외경제관계장관과의 회담에서 합의(9. 2)되었던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양국간 무역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⁴⁾ 1997년 6월 제2차 러·중 경제공동위에서도 총리급 경제공동위의

4) 다비도프는 1996년 4월 엘친 방중시에는 2000년 200억 달러 실현이 어려우며 그것은 향후 10년간 달성되는 목표라고 말하였다. *Rossiyskie vesti*, 1996. 4 26.

〈표 1〉 러·중 무역동향(1990~1996)

(단위 : 100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중국 통계	합 계	4,379	3,904	5,862	7,679	5,077	5,463	6,846
	중국 수출	2,239	1,823	2,336	2,692	1,581	1,984	1,693
	중국 수입	2,140	2,081	3,526	4,987	3,496	3,479	5,153
러시아 통계	합 계			4,654	5,402	3,786	4,240	5,725
	러시아 수출			2,864	3,068	2,834	3,376	4,722
	러시아 수입			1,790	2,334	952	864	1,003

- * 1991년까지는 구소련, 1992년 이후는 러시아와의 수출입.
- * 러시아측 통계수치가 적은 이유는 ① 러시아 통계수치에 이른바 「보따리장수」의 무역규모가 삽입되어 있지 않고, ② 러시아의 수출입관리가 그만큼 정교하지 못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가 많다는 의미임.
- * 중국 통계는 中國海關總署, 「海關統計」, 각년호; 러시아 통계는 「러시아연방의 외국무역통관 통계」, 각년호.

연 2회 정례화에 합의하는 동시에 2000년 200억 달러 의지가 재천명되었다.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은 철강, 비철금속, 화학비료, 목재 등의 중간재, 일부 기계·설비, 자동차, 항공기·부품 등 중국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품목들이며, 수입품목은 식육·유지, 야채, 과일, 기타 식료품, 의약품, 신발, 가전제품, 가구 등 러시아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다. 따라서 양국간 상품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이며 그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러·중 교역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⁵⁾

첫째, 바터교역의 한계이다. 러·중무역 특히 양국간 국경무역은 바터무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 거래방식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중 양국 모두에 유리한 방식이며, 특히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방간의

5) 小川和男, “1990年代のロ中貿易・經濟關係の展開とロシア極東地方,”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2卷 第1號 (1997年 1月), pp. 17~18.

무역거래에는 미경험자들도 손쉽게 국경무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바터무역은 원시적인 거래방식이며, 당연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쌍방이 모두 일반적인 국제거래방식에 따른 무역확대가 모색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WTO 조기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방식에 의한 무역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러·중간 국경무역은 지금까지 바터거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양국 기업간 신용만으로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고 은행을 이용한 신용보증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96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러·중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1999년말까지 무역결제를 모두 외화결제로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다.⁶⁾ 결국 무역패턴의 변화를 통해 양국간 교역규모와 구조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⁷⁾

둘째, 러시아에 수출되는 중국 제품은 품질이 매우 조악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어⁸⁾ 한국 또는 일본 제품과 경쟁할 경우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국측의 경제긴축정책이 러시아의 수출을 억제하고 있다. 예컨대 1993년의 러시아제 철강의 대량 수출은 중국의 건설 붐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은 러시아의 수출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최근 수년간의 물가급등은 양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편 엘친의 1996년 방중을 통하여 「에너지협력협정」, 「원자력 평화이

6) *Rossiyskie vesti*, 1996. 12. 15, s. 3.

7) 1996년 4월 러·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외화결제에 의한 양국간 통상·경제관계의 발전, 에너지, 기계제작, 항공·우주산업, 농업, 운수, 고도기술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Diplomaticheskii vestnik*, No. 5, 1996. 5, s. 18. 실제로 양국간 무역에서의 바터비율은 1994~95년의 1년동안 50%에서 28%로 저하하였다. "Rossiya-Kitai : sotrudnichestvo, obrashchennoe v X XI vek," *Problemy Dal'nego Vostoka*, No. 4, 1996, s. 4~7. 한편 러시아 측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의 3분의 1이 바터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문제시하고 있다. *Izvestiya*, 1996. 12. 15, s. 3.

8) *Segodnya*, 1996. 11. 19, s. 13 ; *Rossiyskie vesti*, 1996. 12. 11, s. 3 ; *Izvestiya*, 1996. 11. 11, s. 4.

용협정」, 「우주탐사·개발협정」, 「지적소유권 보호협정」, 「경제무역협력의 정서」 등 14개의 실무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 경제협력도 그후 지속적으로 모색·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중국간 석유·가스관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을 합의하고 중국이 삼협(三峽)댐 건설에의 러시아 참여를 요청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엘친의 방중 목적이…러·중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새로운 탄력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는⁹⁾ 점에서 이와 같은 대형 실무협정의 체결이 향후 러·중 경제협력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대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에너지협력협정」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파이프라인 부설을 언급하면서도 부설장소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건설구상은 수년 전부터 나온 것이며, 이르쿠츠크 유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에 이른다는 루트(연간 20억m³의 원유 공급), 이르쿠츠크의 코브크타(kovykta) 가스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일본에 이르는 루트(연간 250억m³의 천연가스 공급)이다.¹⁰⁾ 그러나 문제는 건설경비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그후 1997년 11월 정상회담에서 넴쑤프 제1부총리와 이남청 부총리간에 이르쿠츠크-중국(한국-일본) 루트 건설을 위한 비망록이 서명되었지만, 구체적인 건설루트와 재원조달 방안 등은 협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¹⁾

「원자력 평화이용협정」도 파이프라인 건설구상에 못지않은 대규모 협력 사업이다. 향후 10년간 원자력에너지분야에서의 러·중 양국간의 협력에 관한 것으로서 러시아측이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와 우라늄농축설비 건설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며, 총액 30억 달러의 프로젝트이다.

중국에서의 러시아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러시아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1992년 12월 요녕성(遼寧

9) *Izvestiya*, 1996. 4. 24.

10) *Izvestiya*, 1996. 4. 24.

11) “Moskva-Pekin : pyatyy dialog na vysshem urovne,” *Rossiyskaya gazeta*, 1997. 11. 11. s. 1.

省)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에 조인하였으나, 이후 이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95년 6월 러시아측이 요녕성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25억 달러의 정부차관을 연리 4%로 중국측에 공여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중국측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으며, 옐친의 1996년 4월 방중시에도 결국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¹²⁾ 그러다가 1996년 10월 미하일로프 원자력장관의 중국 방문시 중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장소를 동북부의 요녕성에서 동부의 강소성(江蘇省)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러시아가 이에 동의(10. 17)함으로써 원전 건설 장소조차 바뀌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3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이 문제이며, 러시아 대통령공보관 야스트르젠프스키(Sergey Yastrzhembskiy)가 1997년말까지 원전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에서도 계약이 체결되어도 이 사업이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¹³⁾

결국 이와 같은 러·중간의 일련의 실무협정들은 무기수출에 치중한 러·중 무역구조를 시정하고 대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러·중 경제관계에 탄력을 부여하려는 러·중 양국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목표로서는 의미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낙관만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군사교류

러·중간에는 정치·군사관계의 긴밀화를 배경으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이 1992년에 30년만에 재개되어 현재 계속 확대되고 있다. 양국 간 무기거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중국 측 무역통계에 의하면, 1995년 러시아는 중국에 1억5,464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였으

1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6, 1996.

13) Andrey Smirnov, “Moskva-Pekin : diplomatiya v domashnikh tapochkakh,” *Segodnya*, 1997. 11. 11, s. 3 ; Dmitriy Kosyrev, Stanislav Petrov, “Boris Yel'tsin I Tszyan tszemin' sdelali shto smogli,” *Nezavisimaya gazeta*, 1997. 11. 12, s. 1, 7.

며, 1996년에는 6,854만 달러를 수출하였다고 하며,¹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로는 1992~95년간 합계 25억 달러 이상의 무기거래가 있었다고 한다.¹⁵⁾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최근 5년간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구입에 적어도 5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하였다.¹⁶⁾

그러나 이처럼 양국간 무기거래에 대한 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간에 1995~96년간 대규모 무기상담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다량의 무기가 인도되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러시아제 전투기 SU-27SK가 1992년 26대, 1996년 4월과 8월에 각 11대 등 총 48대(총액 17억 달러)가 공여된데 이어,¹⁷⁾ 앞으로 200대의 SU-27을 중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는 총액 20억 달러(공장건설과 관련 기기의 비용 포함)의 협정이 러·중 양국간에 체결되어 있다고 한다.¹⁸⁾ 중국의 SU-27 라이선스생산에 대해 관계자들은 중국의 항공산업 발전이 매우 빠르고 국산전투기 개발기술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SU-27 국산화에 10년도 안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⁹⁾ 1996년 봄에는 중국의 국산전투기 J-18II 약 100대 분에 장착할 러시아제 레이더 도입이 합의 되었으며,²⁰⁾ 군사용 헬리콥터 MI-171 10기도 수출되었다고 한다.

지상장비로는 1993년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S-300PMU가 공여되었으

14) 中國海關總署, 「海關統計」, 1996年 12月號; 小川和男, 「1990年代のロ中貿易・經濟關係の展開とロシア極東地方」, p. 15.

15) *Financial Times*, December 5, 1995.

16) "Can a bear love a dragon," *Economist*, April 26, 1997.

17) *Segodnya*, 1996. 11. 26 ; *Nezavisimoe voennoe obozrenie*, 1996. 12. 26, s. 6 ; *Economist*, April 26, 1997. 1995년 12월에는 SU-27 전투기 72기의 중국 공여를 결정한 「러·중 군사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The New York Times*, February 7, 1996.

18) *Segodnya*, 1996. 11. 26, s. 6.

19) 平可夫, 「ロシア・中國の準軍事同盟」, 「軍事研究」, 1997年 6月, p. 98. 홍콩의 「星島日報」, 1997年 8月 12일에 의하면, 중국이 조만간 SU-27 생산에 착수하여 앞으로 3년 이내에 3백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20) 齊藤元秀, 「ロシアの對中「戰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外交の構造」, 「杏林社會科學研究」, 第12卷 第2號(1996年 9月), p. 11.

며, T-72 전차와 BMP 장갑차도 인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¹⁾ 현재 러·중간에 교섭되고 있는 무기품목은 S-300, TOR-M1, TUNGUSKA-M 등 지대공미사일과 T-80U 전차 등이다.²²⁾

한편 해군 무기의 경우, 1994년 11월 그로모프 해군사령관의 방중시 구형 킬로(Kilo)급 잠수함인 바르샤반카(Varshavyanka) 4척의 판매가 합의·체결되었는데,²³⁾ 현재 2척이 인도되었으며 6척의 추가 도입이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⁴⁾ 그외 이봉 총리의 방러시 2척의 사브리멘니(Sovremenny)급 구축함 구입협정이 조인(96. 12. 27)되었으며, 총 8억 달러가운데 4억 달러가 선불되었다고 한다.²⁵⁾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SU-27 이후 최대의 무기거래로서 사브리멘니급과 중국산 여호(旅湖)급 구축함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해양함대의 편성 등 중국 해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무기매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현 단계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1996년 3월 중국이 러시아제 SU-27 전투기와 킬로급 잠수함이 참가한 군사연습과 미사일 발사연습 등을 대만해협에서 실시함으로써 야기된 중·대만 위기시에도 러시아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²⁶⁾ 군 현대화를 강조하여 왔지만 아직 중국의 군사력은 대

21) Barbara Starr, "USN Keeps an Eye on Old Foes and Allies," *Jane's Defence Weekly*, May 22, 1993, p. 8; 김태호, "1990년대 중·러 군사협력의 현황과 전망," 「중소연구」, 제20권 제1호(1996년 봄), p. 245.

22) *Izvestiya*, 1997. 4. 25, s. 3.

23) Robert Karniol, "China to Buy Russian 'Kilo' Submarines," *Jane's Defence Weekly*, November 19, 1993, p. 1; 김태호, "1990년대 중·러 군사협력의 현황과 전망," p. 245.

24) 平可夫, "ロシア・中國の準軍事同盟," pp. 98~99. 중국은 이 잠수함의 내부구조를 서방 또는 중국제 신형 전자·사격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량할 것이라고 한다. *ibid.*

25) 平可夫, "ロシア・中國の準軍事同盟," p. 99. 러시아의 구축함은 우달로이(udaloy)급과 사브리멘니급이 있는데, 平可夫는 중국이 사브리멘니급을 선택한 이유를 ① 우수한 중거리 방공(防空)능력과 대함(對艦) 공격성능, ② 가격상의 장점, ③ 최근 중국산 여호급 구축함 건조의 어려움, ④ 강태민의 군지지 확보 필요성 등을 들고 있다. *ibid.*, pp. 99~101.

만을 제압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이 ①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손상하지 않고, ②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③ 지역의 군사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군사기술협력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그러나 현재 러시아가 중국에 첨단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수호이 전투기의 기종에 있어서 인도에는 첨단 공격능력을 갖춘 SU-30MK를 공급한 데 비해 중국에는 초기형인 SU-27SK를 수출하였으며, 1996년 10~11월 중국 주해(珠海)와 서울에서 거의 동시에 항공전시회가 개최되었을 때 서울에는 최첨단신예기 SU-37을 보낸 것에 비하여 중국에는 SU-27과 SU-30을 전시하였다. 지상장비 수출에서도 한국에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등을 수출한 것에 비하여 T-80과 같은 공격적 성향이 강한 무기는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수출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돕게 된다는 점이다.²⁹⁾ 이 점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이 중국의 군사대국화 필요성을 부추기면서 러시아제 무기 구입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이즈베스찌야」는 현재의 속도대로 중국군이 장비의 근대화 노력할 경우 앞으로 5년후 오클랜드분쟁형의 군사작전을 전

26) 예컨대 *Segodnya*, 1996. 5. 27은 대만위기가 대만총통 선거에서 대만독립과 후보의 선출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중국이 야기한 시위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였다.

27) 러시아의 외교당국자에 의하면, 이러한 원칙이 1992년 12월 조인된 「러·중 군사기술협력 정부간 각서」에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E. Afanas'ev, G. Logvinov, "Rossiya i Kitai : na poroge tret'ego tysyacheletiya," *Mezhdunarodnaya zhizn'*, No. 11~12, 1995, s. 55. 그후 1996년 12월 11일 블샤코프 부총리의 중국방문시 러·중 군사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28) 미국은 러·중 군사협력이 아·태지역의 세력균형을 저해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러시아의 SS-18 대륙간탄도탄을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22, 1996.

29) 미국도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 도입으로 인한 특히 중국 공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Richard D. Fisher, "China's Purchase of Russian Fighters : A Challenge to the U.S.," <http://www.sbsc.org/heritage/library/categories/forpol/asc142.html>.

개하여 대만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군사기술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 불가결하다고 강조하였다.³⁰⁾

3. 국경선 확정

7,600여km에 달하는 구소련·중국간 국경은 두 구역으로 구성되는데, 러시아와 중국간의 동부국경과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타지키스탄 등과 중국간의 서부국경이다.³¹⁾ 이 가운데 동부국경은 1991년 5월 16일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모스크바 방문 시에 소·중 양국 외무장관에 의해 「소련·중국 국경 동부지구에 관한 협정」 조인을 통해, 그리고 서부국경은 1994년 4월 26일 카자흐스탄·중국 국경협정, 1994년 9월 3일 러·중 국경 서부지구에 관한 협정 체결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들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경이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러·중간의 핵심 쟁점으로 되어왔다. 여기에서는 동부국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³²⁾

일반적으로 국경확정은 국제법상 탈베그(Thalweg)원칙에 따라 선박통

30) *Izvestiya*, 1996. 3. 14. 한편 러시아는 대만과의 실질관계 발전을 착실히 도모하고 있다. 즉 1992년 9월 「모스크바·대북 경제문화협력위원회」와 「대북·모스크바 경제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무역업무와 영사기능을 수행할 대표부를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와 대만(대북·고웅)에 설치하고 발표한 이래, 대만은 1993년 7월 모스크바에 대만대표부를 설치하였으나, 러시아는 자금난을 이유로 계속 미루어오다가 1996년 12월 16일 러시아대표부를 대북에 정식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2억8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액이 1994년 12억 달러, 1995년 18억2천만 달러, 1996년 약 3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1995년의 경우 대만은 러시아의 10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대만의 대러시아 투자도 증가하여 1996년말 약 10억 달러 규모이다. 이와 같은 러·대만관계 발전은 러시아의 실리주의적 전방위외교를 예증하는 것이다.

31) 동부지구는 4,431km의 러·중 국경이며, 서부지구는 55km의 러·중 국경, 1,700km의 카자흐스탄·중국 국경, 1,000km의 키르기스탄·중국 국경, 400km의 타지키스탄·중국 국경 등 총 3,155km이다. 이 수치는 최종 국경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2) 4,500여km에 달하는 러·중간 국경문제에 관한 역사와 인식 차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Vladimir S. Myasnikov, *Dogovornymi stat'yami utverдили* (Moskva : Institut Dal'nego Vostoka RAN, 1996) 참조.

항이 가능한 수로인 경우 하천 최저상의 중앙선으로 하고, 산악지대의 경우 산맥의 능선으로 하며, 항해가 불가능한 하천의 경우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중 동부국경의 경우, 탈베그원칙이 아니라 주요 항행로를 중심으로 국경선을 획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986년 7월의 블라디보스토크연설에서 강의 주요 수로를 국경선으로 정할 것을 명언하였으며,³³⁾ 1987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소·중 제2차 국경문제 협의에서 항행이 가능한 하천에서는 항로의 중앙에,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에서는 하천의 중앙선을 국경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던 것이다.³⁴⁾ 이후 소·중 양국은 동부국경상의 수많은 천중도(川中島) 처리를 기본적으로 마무리짓고 마침내 동부국경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60년대 국경분쟁지역이던 다만스키섬(珍寶島)도 중국령으로 귀속되었다.³⁵⁾

그러나 동부국경협정에서는 하바롭스크 근교에 있는 아무르강(黑龍江)의 볼쇼이·우수리스크섬(黑子島)과 타라바로프섬, 동시베리아 치타주에 있는 아르군강(額爾古納河)의 볼쇼이섬 등 3개의 섬에 대한 국경 획정을 미정으로 남겨둔채³⁶⁾ 1991년 5월 고르바초프·강택민 공동성명에서 “쌍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에 이르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욱 집중적으로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³⁷⁾

그후 이들 도서에 대한 국경획정협상이 계속되어, 1994년 1월 중국을 방문한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볼쇼이·우수리스크섬의 중심부에 국경선을 긋고 섬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중국측은 분명한 입

33) *Pravda*, 1986. 7. 29, s. 3.

34) *Vestnik ministerstva inostrannykh del SSSR*, No. 4, 1987. 9. 25, s. 26.

35) 소련방이 해체한 후 러시아 정부는 동부국경협정을 계승하고 러시아 최고회의는 1992년 2월 2일이 협정을 비준하였다(*Diplomaticeskii vestnik*, No. 4~5, 1992. 2. 29, s. 72~73). 중국측에서는 1992년 2월 25일 비준하였다. 이 협정은 그후 코지레프의 북경방문시 비준증서를 교환함으로써 1992년 5월 16일 발효하였다.

36) 3도의 국경이 미정이라는 사실은 *Diplomaticeskii vestnik*, No. 4~5, 1992. 2. 29, s. 73 ; No. 7, 1992. 4. 15, s. 20 ; *Izvestiya*, 1992. 3. 23, s. 7 등에서 확인된다.

37) *Vestnik ministerstva inostrannykh del SSSR*, No. 11, 1991. 6. 15, s. 7.

장표명을 하지 않았다.³⁸⁾ 한편 중국은 아무르강의 2도에서 러시아가 양보하면 아르군강의 불쇼이섬을 러시아 측에 양보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러시아측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³⁹⁾

1996년 4월 옐친 대통령은 중국방문을 목전에 두고 러·중 동부국경협정과 모스크바의 중국접근 정책에 대한 러시아극동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하바롭스크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옐친 대통령은 3도를 결코 중국 측에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동부국경협정에 따라 국경을 획정하는 것이 대국(大國)러시아의 책임임을 강조하였다.⁴⁰⁾ 아무르강의 2도를 관할하는 하바롭스크변강의 이샤예프(Viktor I. Ishaev) 지사도 동부국경협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2도의 장래에 우려를 표명하였다.⁴¹⁾

옐친의 말 가운데 뒷부분은 동부국경협정에서 획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변강 두만강유역의 연장 약 19km의 지구에서 국경표지 설치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⁴²⁾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92년 2월 동부국경협정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된 후 1996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한 동부국경 획정작업이 1993년 4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해변강 나즈라첸코(Yevgeniy I. Nazdratenko) 지사와 연해변강 의회 및 현지 주민들은 약 1,300~1,500ha의 ‘러시아의 고유영토’가 중국측에 ‘일방적으로 탈취’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⁴³⁾ 이로 인해 국경표지 설치작

38) *Nezavisimaya gazeta*, 1994. 1. 28, s. 2.

39) *Izvestiya*, 1994. 2. 25, s. 3.

40) *Izvestiya*, 1996. 4. 24 ; *Segodnya*, 1996. 4. 25 ; *Nezavisimaya gazeta*, 1996. 4. 25, s. 1.

41) *Izvestiya*, 1994. 5. 17, s. 3 ; *Segodnya*, 1996. 7. 25, s. 5.

42) 1996년 12월 이봉 총리의 러시아 방문시 옐친 대통령은 1997년까지 국경획정작업을 완료할 것이라 표명하였다. *Segodnya*, 1996. 12. 28, s. 1. 러시아 국경경비국(FPS) 국제조약국장 마니로프 중장도 동부국경획정작업을 1997년까지 완료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동시에 중장은 협상과정에 타협은 있을 수 있으나, 미확정 3도에 대해서는 타협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Segodnya*, 1996. 4. 18, s. 2. 1991년 8~9월에 조인된 양국간 협정에서는 연해변강의 두만강유역(하산지구)이 1996년말까지 중국측에 인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Nezavisimaya gazeta*, 1996. 10. 3, s. 5.

43) 연해변강 정부와 의회는 연해변강으로부터 중국에의 영토 할양을 인정하는 러시아 외무부의 국경획정 관련 문서가 폭로된 1993년 여름부터 영토할양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시하여 왔다. *Komsomol'skaya pravda*, 1993. 8. 6, s. 1.

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가장 반발이 강한 곳은 연해변강의 한카(Khanka), 우수리스크(Ussuriysk), 하산(Khasan) 등 3개 지구이다. 특히 러시아측이 할양한 하산의 두만강 동안(東岸)에 중국이 상업항구와 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는 계획이 유포되면서, 극동지역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즉 두만강 하구지역에 중국의 상항이 건설되면,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나호트카항의 물동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러시아극동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⁴⁴⁾

이러한 맥락에서 나즈라젠코 연해변강 지사는 동부국경협정 파기 또는 수정을 주장하고 있으며,⁴⁵⁾ 1996년 3월 19일 연해변강 의회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Konstitutsionnyy Sud RF)에 동부국경협정의 승인 결정의 합헌여부를 묻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⁴⁶⁾ 동부국경협정에 대한 반발은 러시아측의 국경확정작업위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엘친의 중국 방문 직전인 4월 5일 러시아측 국경확정작업위원회 군사고문 로조프 소장은 하산지구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중국측에 양도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후손에게 유한(遺恨)을 남길 수 없다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⁴⁷⁾

이에 반하여 러시아의 외무부, 군부, 국경경비대는 기본적으로 조기 국경확정론의 입장에 서있다. 파노프 외무차관은 러·중국경을 획정하지 않으

44) *Izvestiya*, 1996. 4. 24 ; *Moscow News*, April 18~24, 1996.

45) *Izvestiya*, 1995. 2. 10 ; *Kommersant' Daily*, 1996. 3. 2.

46) 연해변강측의 주장에 의하면, 동부국경협정이 구 러시아공화국 헌법 제104조(국경변경 결정은 러시아공화국 인민대의원대회의 권한이라는 규정)를 위배하여 소련방 정부에서 임의로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① 동부국경협정 비준에 관한 소련방 최고회의의 결정, ② 동부국경협정의 본문, ③ 국가에 대한 수수로 지불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미비를 이유로 4월 하순 청원서 검토를 거부하였다.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회피하려는 구실이었으나, 연해변강은 서류를 구비하여 재차 헌법 소원할 수 있을 것이다.

47) *Izvestiya*, 1996. 4. 24 ; *Moscow News*, April 18~24, 1996. 나즈라젠코 지사는 로조프 소장에게 자신의 보좌관으로 취임하도록 요청하였다.

면 중국과의 관계가 대결의 시대로 역류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가 중국에 인도하려는 약 1,500ha의 토지는 호수와 삼림 등으로 주로 이루어진 미경작지이므로 전략적 가치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⁸⁾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최상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옐친 대통령과 모스크바의 입장은 중국이 강대화하거나 또는 불안정화하기 전에 양국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국경문제를 해결해두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국경 획정을 위해 강권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극동의 반대를 의식하여, 류리코프(Dmitriy B. Ryurikov) 국제문제담당 대통령보좌관은 국경문제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국경 획정의 결정은 당분간 동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며,⁴⁹⁾ 옐친 대통령은 동부국경협정에 기초하여 국경 획정작업을 진행하되, 중국 측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 공동 이용하고, 러시아인이 경작과 수확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⁵⁰⁾ 1995년 6월 이봉 총리 방러시에 발표된 공동성명과 1996년 4월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듯이 공동이용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측도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연해변강을 중심으로 동부국경획정을 둘러싼 반대론이 뿌리깊은 상황에서 옐친 대통령은 1996년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국경선 획정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4. 11)하고, 하바롭스크변강, 연해변강, 아무르주, 치타주, 유대자치주 행정수반들에게 국경표지 설치작업에 전력을 다해 협력하고 현지 주민에게 표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⁵¹⁾

러시아극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중 국경획정에 대한 반대론의 근저에는 중국팽창론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이런 점에서 연해변강측의 우려는

48) *Izvestiya*, 1996. 2. 10.

49) *Segodnya*, 1996. 4. 24.

50) *Izvestiya*, 1996. 1. 29 ; *Krasnaya zvezda*, 1996. 4. 26.

51) *Segodnya*, 1996. 4. 12, s. 1.

이해할 수 있으나, 국제적 약속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엘친 대통령은 약 19km의 국경선이 획정되지 않으면 러·중 동부국경 전체에 우려가 남는 결과로 되며, 그 경우 정치적·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것은 러시아극동이라고 경고하고 있다.⁵²⁾

국경선 확정은 모스크바·중앙정부의 전관사항이며, 러시아가 현재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부국경협정과 국경획정원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1997년 11월 엘친의 중국방문을 통해 3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되, 3도를 포함하여 문제가 되었던 중국측에 편입되는 19km의 국경지대에 대해서도 중국측과 공동 개발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국경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향하는 모스크바와 러시아극동의 중국에 대한 감정에는 메우기 어려운 깊은 골이 놓여 있으며, 더욱이 모스크바와 북경간의 이해관계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경획정문제가 완전히 타결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⁵³⁾

52) *Izvestiya*, 1996. 4. 30.

53) 나즈라젠코 지사는 엘친에 의해 1991년 10월 연해변강 지사에 임명되어 그 동안 엘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1995년 12월 민선지사로 선출된 이후 국경획정문제, 변강내 자원개발권, 사유화 조치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대립하여 왔다. 이에 따라 엘친은 나즈라젠코의 중앙정부 보조금 운용권한과 대통령명령 수행권한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연해변강 보안국(FSB) 지부장에게 이양(97. 6. 6)하는 동시에, 연해변강의 극심한 경제난, 치안부재 등 경제·사회불안의 책임을 물어 념쑤프 제1부총리를 현지에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6. 11)하는 등 나즈라젠코 지사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즈라젠코는 전력난 악화 등 경제난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반발하면서, 연방 대통령에게는 민선된 지방행정수반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문제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대립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나즈라젠코가 변강 주민들에게 직접 신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진 사임하고 지사선거를 조기 실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군축문제

러·중 양국의 관계발전과 함께 양국간 국경지대에서의 신뢰구축과 군축 실현을 위한 노력이 모색되어 왔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방중시의 소·중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국경지대에서의 병력감축과 신뢰구축조치 실시를 위해 상호 노력할 것임이 천명되었으며,⁵⁴⁾ 이듬해 4월 이붕 총리의 방소시에는 「소·중 국경지대에서의 병력 상호 감축과 군사분야 신뢰 강화의 지도원칙에 관한 정부간 협정」이 조인되었다.⁵⁵⁾

그후 1991년 5월의 소·중 공동성명은 병력삭감과 신뢰강화조치에 관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력적인 협의를 계속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⁵⁶⁾ 그러나 소련방 해체이후 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92년 12월 옐친 방중시에는 2000년까지의 단계적 병력삭감을 포함한 「국경지대 병력감축과 신뢰강화에 관한 정부간 각서」가 조인되고, “이들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작성을 1994년말까지 완료할 것”임을 명기함으로써 구체적인 진전을 보기 시작하였다.⁵⁷⁾

그러나 실제로 협상은 국경병력 감축과 관련하여 양국간 국경병력배치의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미 1992년 12월 양측은 국경병력 감축과 신뢰구축의 대상지역을 규정하면서 국경지대의 범위를 국경선의 쌍방 각 100km 이내 지역으로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나,⁵⁸⁾ 실제로 100km 이내 지역

54) *Vestnik ministerstva inostrannykh del SSSR*, No. 11, 1989. 7. 15, s. 26. 공동성명에 따라 병력감축·신뢰구축을 위한 소·중 협상이 1989년 11월부터 개시되었으며, 소련방 해체이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도 참가하였다.

55) *Vestnik ministerstva inostrannykh del SSSR*, No. 9, 1990. 5. 15, s. 28.

56) *Vestnik ministerstva inostrannykh del SSSR*, No. 11, 1991. 6. 15, s. 7.

57) 「RPロシア・ニュース」, 第4605號, 1992년 12월 4일, p. 1; 第4616號, 1992년 12월 21일, p. 2.

58) 1992년 12월 옐친 대통령의 방중 전에 종료한 제8차 국경지대 병력삭감·신뢰강화조치에 참가한 러시아대표 로슈코프는 병력감축 대상지역을 국경에서 각 100km 이내로 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밝혔으며, 감축대상은 전차, 장갑차, 전투기, 하천용 해군 선박, 전술핵, 미사일, 화포 등 공격무기와 국경경비대라고 언급하였다. *Izvestiya*, 1992. 12. 2. s. 5

의 병력배치 현황이 양측간에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즉 러시아 측은 동부국경에서 물류수송의 핵심인 시베리아철도가 국경을 따라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하바롭스크 등 정치·경제적 중심도시들과 많은 중요 방위대상시설과 지역이 국경지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경방위의 주력도 국경지대 100km 이내에 전개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 측은 강력한 소련의 기갑군단을 국경선에서 저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소련군을 내지(內地)로 깊숙이 끌어들여 타격 한다는 인민전쟁전략에 입각하여 주력야전군을 국경지대보다 약 400km 떨어진 곳에 후방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양측이 100km 이내의 국경지대를 국경 군사력 감축대상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이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⁵⁹⁾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어려운 군축문제와 분리하여 신뢰구축문제를 따로 협상할 필요가 생겨, 러·중 양국은 1995년 1월부터 신뢰구축문제와 군축문제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6월 이봉 방러시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국경지대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협정을 군축협정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문서로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기되고,⁶⁰⁾ 마침내 1996년 4월 옐친 방중시에는 「국경지대에서 군사분야의 신뢰 강화에 관한 5개국 협정」을 상해에서 조인(4. 26)하였다.⁶¹⁾ 협정의 전문과

59) 1995년 5월에 북경을 방문한 그라초프 국방장관은 국경선 100km이내에서의 병력감문제로 국경병력감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Krasnaya zvezda*, 1995. 5. 18, s. 1.

60) *Diplomaticheskii vestnik*, 1995. 7. 7, s. 5.

61) 옐친 대통령이 4월 25일 북경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곧바로 상해로 옮겨 5개국 신뢰구축협정을 체결한 것은 중국측의 요망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강택민은 중국 경제발전의 거점이며 금융경제의 중심지인 상해를 CIS 국가 대통령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중국과의 경제교류 필요성·중요성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실제로 강택민은 CIS 각국 대통령들과 개별 회담을 갖고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합의하였고, 옐친도 상해시장 등과 회담하면서 세계와 사유재산제도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상해에서의 각국 지도자의 동향에 대해서는 *Segodnya*, 1996. 4. 27.

소련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발표된 1972년 미·중 공동성명이 상해에서 발표되었음을 감안할 때, 상해에서 신뢰구축협정이 체결된 것은 러·중 동반자관계를 미국에 과시하는 신호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보도한 러시아측 간행물은 없으나, 군사정보 교환, 군사연습과 부대활동의 사전통고 등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었다고 추측된다.⁶²⁾

한편 국경병력 감축협정은 1996년 11월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방중시에 타결되어,⁶³⁾ 1997년 4월 강택민의 러시아 방문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타지키스탄·중국 등 5개국간에 서명(4. 24)되었다. 협정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독립신문」이 확인한 바로는 전장 7,000km 이상의 국경지대에서 쌍방 100km이내에 전개하는 병력의 수를 (2002년까지) 총 26만800명 이하로 하는데, 중국이 13만400명,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타지키스탄을 포함한 13만400명으로 하며, 지상군, 전선배치 항공부대 및 방공군 항공부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군사력의 전략적 구성요소, 전략미사일군, 해군, 장거리항공부대 및 방공군미사일부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⁶⁴⁾

한편 신퇴구축협정과 군축협정과 관련, 러시아극동지역에서는 안보위험감을 느껴 반발하고 있으나,⁶⁵⁾ 모스크바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크레믈린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즈베스찌야」는 러시아 외무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협정 실시에 의해 국경지대에 진공이 생

62) *Krasnaya zvezda*, 1996. 4. 30, s. 3. 일본측 연구에 의하면 5개국 신퇴구축 강화협정은 쌍방 국경선의 100km이내의 국경지대에서 ① 무력불행사와 무력에 의한 위협 금지, ② 연습의 상호통보, ③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연습에의 상호 감시단 파견, ④ 상대국을 목표로 한 군사연습 금지, ⑤ 군사연습의 규모, 지리적 범위, 회수의 제한, ⑥ 국경경비대의 인원, 구성, 주요 무기에 관한 정보교환, ⑦ 국경침범자에 대한 비인도적·폭력적 저지 금지 등이 규정되었으며, 더욱이 협정내용 위반이 우려될 경우에는 상대국에 질문권을 갖고 질문을 받은 측은 7일 이내(긴급시에는 2일 이내) 회답하는 의무도 명기되었다고 한다. 齊藤元秀, “ロシアの對中「戰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外交の構造,” pp. 15~16.

63) 전기침 중국 외무장관은 국경병력 감축협정이 이미 타결되었으며, 1997년 봄 강택민 총서기의 방러시에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Izvestiya*, 1996. 11. 22, s. 3. 1996년 12월 이붕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시에도 병력감축협정이 이미 타결되었으며, 1997년 러·중 정상회담에서 조인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Segodnya*, 1996. 12. 28, s. 1

64) *Nezavisimaya gazeta*, 1997. 4. 25 ; *Rossiyskaya gazeta*, 1997. 4. 25.

65) *Moscow News*, April 18~24, 1996.

기는 것은 아니며, 러시아군은 방위에 충분한 병력을 국경에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동시에 “합의 달성을 서두른 것은 중국측”이라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병력감축을 보충할 신무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러시아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⁶⁶⁾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자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군은 국방예산 부족 등으로 150만 군대를 120만으로 삭감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데, 19만 극동군의 경우 이미 2만5,000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 전체의 20% 병력 삭감을 감안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 협정의 13만여명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며, 중국측의 입장에서도 감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라고 한다. 따라서 러·중간의 군축협정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광범위한 정치·전략적 의의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구축·군축협정에서 국경주변 100km를 완충지대로 설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러시아가 중국보다 양보하여 협정을 성사시켰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과의 신뢰구축·군축협정을 체결하려 한 크레믈린 당국의 전략적 고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신문」이 우려하고 있듯이, 러시아극동의 군사·안보적 위기 의식은 신뢰구축·군축협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될 소지가 크다.⁶⁸⁾

66) *Izvestiya*, 1996. 11. 20, s. 3.

67) 茅原郁生, “政治戰略的な絆を強めながら‘西’へ向かう中口,” 「世界週報」, 1997年 6月 24日, p. 19. 정치·전략적 의의로서 ① 국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국내문제에 치중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대외전략의 중점을 대미관계와 동남아에 둘 수 있게 되었다. ② 러·중 군사협력(무기이전)이 가속화된다. ③ 중국의 서북국경지역이 안정화된다. ④ 중국 스스로의 병력감축계획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8) 「독립신문」은 러시아연방군의 전투태세가 러시아의 원조로 장비 근대화에 노력해 온 중국인민해방군과 비교할 때,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병력은 부족하고 장비는 노후화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Nezavisimaya gazeta*, 1997. 4. 25.

III.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형성 배경 및 전망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적어도 러시아에게 있어서 CIS 국가들과의 동맹을 제외한다면 최상의 국가관계이며, 정치·경제·군사 등 제반분야에서 최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러·중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우선 러시아의 입장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특별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등한 동반자관계」 수립을 천명하고 여타 강대국과의 전방위적 선린동거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천명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NATO의 동방 확대로 상징되는 유럽방면에서의 대러시아 압박을 중국카드를 통해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즉 신국제질서하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가장 위협시되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과거 중·소동맹의 심리적 효과를 노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취하고,⁶⁹⁾ 일본으로 하여금 대러 관계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입지 확보 전략이다.

둘째, 동북아시아전략 차원에서 미·일의 신안보동맹에 대응하고, 나아가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필요성이다. 러·중 협력을 통한 대미·일 견제라는 구상은 1991년 5월 강택민 방소시의 공동성명에서도 나타났지만, 현재의 러·중 제휴는 예전과 달리 미·일의 반발이 중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서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중국간의 불신을 조장

69) 예컨대 미국이 러시아를 G-7에 정식 참가시켜 G-8으로 만든 데에는 러·중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미국의 대중전략 때문이었다는 관측도 있다. 名越健郎, “ロシアの實力不足を如實に示デたデンバーサミット,” 「世界週報」, 1997年 7月 15日, p. 9.

하고, 일본의 대중국 경계심을 자극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고도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극동시베리아개발을 위한 외부적 환경 조성 필요성이다. 명실공히 아·태 지역국가로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극동시베리아개발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접국과의 선린우호협력이 긴요하다.

넷째, 실리 추구 필요성이다. 현재 러시아의 무기거래에서 최대의 파트너인 중국에의 무기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수출은 정치·군사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방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 필요성이다. 구미에서는 러시아 상품을 외면하고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모색·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국측 배경은 러시아측 배경과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측면이 강한데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패권화를 우려한 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중·러 연합으로 대처할 필요성이다. 미국에 대해 중국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중·소동맹의 역사적·심리적 유산을 도구로 하여 미국이 대중국 참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⁷⁰⁾

둘째, 국내발전을 위한 국경지역 안정화 필요성이다. 특히 포스트 등소평시대에 중국으로서는 강택민체제의 대외관계 안정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외교성과로서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실리적 필요성이다. 특히 중국에는 대러 접근 자체를 유도하는 요인이 강하다. 「인민전쟁」 개념에 입각한 군사전략을 1985년 이후 「유한국부전쟁」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화력, 기동력 및 원거리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둔 국방현대화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국 방위산업의 낙

70) 러·중관계를 미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활용하는 측면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97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패권주의·강권정치」에 대한 경계를 포함시키고 난 후 중국은 이를 중국의 평화5원칙의 연장으로서 중국 외교의 승리로 평가하였다. 「北京週報」, 1997年 5月 13日.

후로 외국으로부터의 무기·기술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여 중국에의 무기수출이나 기술이전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는 거의 유일한 출구이다. 더욱이 중국의 무기체계 대부분이 구소련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장비와 기술도입은 매우 효과적이다.

한편 강택민(江澤民) 주석, 이봉(李鵬) 총리, 이남청(李嵐清) 부총리, 전기침(錢其琛) 부총리·외교부장, 추가화(鄒家華) 부총리, 이귀선(李貴鮮) 국무위원, 송건(宋健) 국무위원, 유화청(劉華清)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엽선평(葉選平)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위건행(尉健行) 북경시 당서기, 원승무(阮崇武) 해남성장, 정형고(丁衡高) 국가군사과학기술위 주임, 이숙쟁(李淑錚)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 이철영(李鐵映) 국무위원 등 중국 최고지도부의 다수가 소련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내 친 러시아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⁷¹⁾ 즉 소련유학 경험으로 인한 중국 지도층의 친 러시아 성향과 무기체계의 상합성, 여타 국가로부터의 무기구입 한계, 러시아의 제공능력 등이 어우러져 러·중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러·중 양국이 미·일의 신안보동맹과 NATO의 동방 확대 등을 군사블록 강화로 간주하고 이에 공동 대처할 필요성을 점차 절감하게 될 경우, 군사동맹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나, 동시에 러·중관계 발전에는 상당한 제약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양국은 냉전시기의 중·소 군사대결을 비롯하여 역사적·민족적으로 뿌리 깊은 불신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측근의 말에 따르면, 옌친 대통령의 조언자들은 중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을 말하면서도 머리 속으로는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인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⁷²⁾

둘째,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명백히 미국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을

71) 陳潔華, “太い人脈に支えられて「密月」に戻った中ロ關係,” 「世界週報」, 1996年 7月 30日, p. 24.

72) *The Strait Times*, April 18, 1996.

배경에 깔고 있으나, 러·중 어느 국가도 미국과의 대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러·중간의 관계는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러시아나 중국이나 모두 대미관계가 우선 이며,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을 견제하는 러·중간의 전략적 제휴라는 구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⁷³⁾ 예컨대 중국 「인민일보」는 중·러관계를 “창끝을 제3국에 향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중·러관계 긴밀화를 “중국의 다각적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다.⁷⁴⁾

셋째, 양국의 배경을 살펴면서도 지적되었으나, 양국은 공히 양국관계 발전을 통해 그 자체의 실리를 얻으려는 측면과 동시에 상대방을 꺾어냄으로써 스스로 서방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이중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반발하는 국내여론도 적지 않다.

그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전투기, 미사일, 야포와 같은 자국산 주요 대외판매품목의 성능을 제고시킴으로써 장차 세계무기시장에 러시아의 경쟁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가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화살로 되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패권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예컨대 바투린(Yuriy M. Baturin) 국가안전보장담당 대통령보좌관을 중

73) 이와 관련하여 「이즈베스찌야」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흥미롭다: “엘친 대통령은 NATO가 러시아 서부 국경 쪽으로 진출하여 대러시아 「블럭」을 형성할 경우, 모스크바는 이에 대응하여 동양에서 동맹자를 찾을 것이라고 클린턴 대통령을 위협한 바 있다...그러나 러시아는 동양국가들과 손잡고 대서방 블럭을 형성할 수도 NATO에 대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를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차관, 투자, 정치적 영향력? 러시아는 스스로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치밀한 동방정책을 세우지도 않고 동양국가들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이 서방에 실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동맹자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이들 양국에게 러시아는 자국 생산의 생필품 판매시장, 무기와 생산원료 구입처 등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크레믈린의 「동양 블럭」 계획은 실현될 수 없다.” *Izvestiya*, 1997. 3. 27, s. 1.

74) 「人民日報」, 1997년 4월 28일.

심으로 작성한 안보교서 초안에서는 군사·정치정세를 분석하면서, 중앙아시아·카프카스지역에 대한 서방과 이슬람국가들의 침투, NATO의 동방 확대,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3가지를 우려할 만한 문제로서 열거하고, 특히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설명하면서 러시아극동의 유럽러시아로터의 분리경향과 인접국으로의 경제지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되는 것은 극동에서 경제적·인구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중국이다”고 명시하였다.⁷⁵⁾

또한 러시아 미국·캐나다연구소 보가투로프 박사는 러·중간 재래식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덜 위협적인 국가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음으로써 러시아 군부가 대중국 무기수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은 현재에도 러시아 국경지역에 2,700대의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고 중국내 100여개 미사일기지 가운데 절반이 북부지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중국이 현재 가상적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거론하고 있지만, 미국은 도저히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고, 일본도 중국의 미사일로서 도달할 수는 있지만 해군력의 후진성을 고려할 때 지상군의 작전반경 밖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지상군의 가상위협은 여전히 러시아밖에 없으며, 더욱이 중·러간 국경분쟁 소지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경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장래의 국경분쟁은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으로 나타나고, 그 경우 열세에 있는 러시아가 불리하게 된다는 인식이다.⁷⁶⁾

또한 엘친의 북경방문시 개최된 러·중 정상회담 첫날 간행된 러시아의 「독립신문」도 “북경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매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요청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무기매각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주변국과의 러시아와의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

75) *Nezavisimaya gazeta-stsenariy*, 1996. 5. 23, s. 2. NATO의 동방 확대문제는 약간의 어구 수정 후에 교서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나 다른 두가지 문제는 정식 교서 발표시에는 빠졌다.

76) 알렉세이 보가투로프,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관심과 극동군사력의 장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대회(1996. 8. 27) 발표논문, pp. 2~3.

나라,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대중 무기매각정책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⁷⁷⁾

더욱이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의 경제적·인구적 측면을 고려한 중국위협론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극동시베리아지역은 1991년말까지 연방정부의 높은 임금 등 인구유인정책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슬라브인의 유럽지역으로의 역이주와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로 인해 인구감소 추세에 있다.⁷⁸⁾ 따라서 노동력 부족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해 중국은 자기나라 잉여노동인구의 수출지역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⁷⁹⁾ 이로 인해 유입된 중국 인구가 야기시키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과 중국의 영토적 팽창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러시아 측에 팽배하게 되었다.⁸⁰⁾ 현재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의 1억 인구(흑룡강성 3,600만명, 길림성 2,500만명, 요령성 4,000만명)에 비하면, 극동인구는 약 800만으로서 극동지역의 중국인에 대한 위기의식은 클 수밖에 없다.⁸¹⁾

77) *Nezavisimaya gazeta*, 1996. 4. 24. 이외에도 중국에의 무기매각에 대한 러시아 국내에서의 우려는 Viktor Stefashin, "Sovremennaya voennaya doktrina Kitaya," *Voennaya mysl*, No. 1, 1993, s. 68; "Kitai na poroge X II veka," *Izvestiya*, 1996. 4. 24, s. 4; Sergey Trush, "Prodazha rossiyskogo oruzhiya Pekinu: rezony i opaseniya," *Nezavisimaya voennoe obozrenie*, 1996. 7. 25, s. 1~2.

78) 한종만,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 가능성과 한계점," 「중소연구」, 제20권 제2호(1996년 여름), p. 28.

79) M. L. 티타렌코, "극동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러·한관계: 러시아 측 관점," 「중소연구」, 제20권 제2호(1996년 여름), p. 279.

80) I. D. 스크르바츠크, "소련붕괴 이후 극동지역의 정치변화와 현황," 「중소연구」, 제20권 제2호(1996년 여름), p. 61. 1997년 4월 25일 러시아 내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극동지역에 1994년 공식 이주자로 등록된 중국인의 수는 약 7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불법 입국·체류자가 급증하면서 100만명이 넘는 중국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극동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나호트카시에는 러시아 최초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기 시작(96. 11)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러시아는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고 불법입국자를 색출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이 합법적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사예프 하바롭스크변강 지사는 러시아인과 결혼한 중국인의 영주권 부여를 제한할 것을 주장(96. 12)하였다.

81)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밀도는 평균 1km²에 1.3명에 불과하고, 한국은 449명, 일본

하바롭스크 변경의 이샤에프 지사는 국경의 현황에 대한 「적성」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엄청난 중국인이 하바롭스크 변경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상품판매와 매점매석 등을 행하고 있다. 그것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변경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중국인이 여기에서 밀수를 행하고 여권과 관세제도를 침해하고 치안을 악화시켰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단속하고 있다. 예전에 외무장관 코지레프가 나에게 당신은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나는 러시아인의 권리를 지키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인들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⁸²⁾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국력신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러시아가 취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발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⁸³⁾ 러시아로서는 중국카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실리를 취하기 위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이용하여 실리를 취하려는 중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패권화가 가시화 되면 될수록 점차 러·중간의 응집력도 저하될 것이다.

328명, 북한 178명, 중국 83명이다. 현재 극동지역의 인구학적 잠재력은 그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부를 개간하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데도 턱없이 부족하다. A. V.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중의식구조의 변화,” 「중소연구」, 제20권 제2호(1996년 여름), p. 153.

82) *Krasnaya zvezda*, 1996. 12. 4, s. 3. 이샤에프 지사는 “러시아극동을 오가는 중국인에 대해 중국의 급속한 팽창이라는 위험한 징조로 보는가 또는 러·중간의 정상적인 상호관계의 한 과정으로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러한 징조는 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이웃사람과 평화롭게 살면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나, 자국의 이익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국경협정의 수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투자만이 러시아극동을 구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Segodnya*, 1996. 7. 25, s. 5.

83) 문홍호 교수도 중·러가 현재 「느슨한 차원의 정치적 연대」 이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러관계가 단순한 우호협력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의 반미 연대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홍호, 「13억인의 미래: 중국은 과연 하나인가?」 (서울: 도서출판 당대, 1996), p. 239.

러·중이 상호 실리를 얻는 동상(同床)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나, 러·중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는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한반도에의 영향요인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한반도의 통일·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적어도 러·중관계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감안할 때, 러·중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한반도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과의 정치·외교·경제·군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그 함의는 더욱 클 것이다.

우선 러·중 동반자관계가 한반도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동북아 정세 전반이 냉전시대로 회귀될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기존의 선린관계도 재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존립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러·중의 대북한 지원이 강화되고, 따라서 북한체제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하였듯이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이해관계의 전면적 일치를 바탕으로 동맹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미국과의 대립을 결코 원하지 않고 오히려 러·중 동반자관계가 대미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둘째,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공동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러·중의 이해관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이라는 측

면에서 볼 때, 상합되는 측면보다 제로·섬·게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있다. 따라서 그 가능성 또한 역시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체제존립을 당면한 전략적 공동목표로 상정할 경우,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대할 것이다. 러·중이 북한의 체제존립을 공동 추구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체제붕괴가 조기화되어 러·중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경우이다. 북한체제가 조기 붕괴되고 남북한 통일이 가속화 되면,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공동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⁸⁴⁾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자체가 한반도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사실상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중 관계발전의 상징성에 기초한 상징적·심리적 차원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상정할 수 있는데, 한국의 러시아 및 중국과의 쌍무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그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이를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중 동반자관계와 관련한 한국의 고려사항을 정치·외교, 군사, 경제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중 제휴가 역내 역학관계에서 자국의 역내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일을 견제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러·중 관계발전은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러·중과의 쌍무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변화되고 있는 주변 역학관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중과의 쌍무관계 발전은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한 러·중의 지지를 유도하는 일차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둘째, 러·중간의 군사협력, 특히 무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러, 한·중 군사협력의 폭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84)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정해 볼 수 있는 러시아의 정책입장에 대해서는 강원식,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7-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필요가 있다. 이는 군사적 우호관계의 수립이 결과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한 지식·정보 제고가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의 주춧돌이 되고, 나아가서 북한의 군사능력을 약화시키는 간접적 방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일본이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도입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우려하여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⁸⁵⁾

셋째, 러·중 관계발전의 결과로서 극동시베리아 경제와 만주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 그 효과가 한국의 경제에도 유리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참여하게 되는 중국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한국이 단독으로 또는 북한과 함께 동참함으로써 러시아 및 중국과의 쌍무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러·중·한 3자 또는 러·중·남북한 4자간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참여는 어떤 의미에서 러·중 관계에 우리가 관여하는 효과를 낳게 되며 결과적으로 러·중관계의 있을 수 있는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러·중 관계발전이 한반도에 미칠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러·중 동반자관계가 동상이몽의 관계이지만, 상호 실리를 위해 한반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한반도의 분단이 유리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체제존립을 당면한 전략적 공동목표로 상징할 경우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결코 러시아와 중국의 국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통일외교정책을 입안·추진할 필요가 있다.

85) 1997년 3월 13일 일본 방위청은 SU-27을 실험연구용으로 1998년 이후 몇 대 구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중국의 SU-27 라이선스 생산을 고려하여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産經新聞」, 1997년 3월 13일.